농민 10명 중 7명 "농사 그만두고 싶다…생계 유지 어려워"

지난해 농가소득 1.6% 감소…사료·난방비 급등 농업구입가격 26.8%↑
농업인 50% 이상 "10년 후 농업 미래 암울"…농업 정책 만족 20% 불과

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여·63)씨는 "곧 농번기에 접어드는데, 비료와 농기자재 등 온갖 비용이 급등해 막막하다"며 "힘겹게 키운 농산물은 제값 받기도 어려우니 누가 고된 농사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농사만으로는 점차 생계 유지도 힘들어지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고 하소연했다.

박씨 처럼 농민 10명 중 7명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농업 생산비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등으로 농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 1500명과 농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71.2%였다. '없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27.8%에 불과했으며, 특히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연평균 소득 및 전체 농가소득 2000만 원 미만 계층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농민들은 그 이유로 '농사만으로 생계가 힘들어서'(81.0%)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7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농사만으로 생계가 힘들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농가들은 전년(4775만원)보다 1.6% 감소한 4699만원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는데 정부의 비료비, 사료비 지원이 없었다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구입가격'은 전년 대비 2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산업의 전반적인 지표가 하락 하다 보니 농업에 대한 농민의 만족감도 하락했다.

직업으로서 농업에 '만족한다'(25.3%)는 농업인의 응답이 지난해(27.9%)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이 '좋아졌다'(25.8%)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8.5%포인트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34.7%)는 응답은 10.0%포인트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업 현장에 있는 농업인 10명 중 5명 이상이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22.2%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보통'이라고 답한 농업인은 23.2%로 45.5%는 '비관적인 편', 9.0%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해 과반 이상이 농업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22.2%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민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53.4%로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며 "농업 현장에는 농업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위협요소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2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각 분야별 전국 1위에 오른 전남 13개 농·축협 조합장들과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 농·축협 13곳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시상금·업무용 차량…직원 특별승진 혜택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2022년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에 전남 13개 농·축협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1113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사업규모 및 사업량 별로 40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 등 총 49개 평가항목에 대해 연간 사업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했다.

전국 1위에 오른 전남지역 농·축협은 ▲고흥 흥양농협(조합장 조성문) ▲광양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 ▲나주 봉황농협(조합장 송정훈) ▲담양 봉산농협(조합장 박요진) ▲신안 압해농협(조합장 천성태) ▲장흥 관산농협(직무대리 박완식) ▲영암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 ▲영암 군서농협(조합장 박현규) ▲영암 삼호농협(조합장 황성오) ▲영암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 ▲화순 이양청풍농협(조합장 안상섭)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 ▲영광축산농협(조합장 이강운) 등이다.

13개 조합에는 시상금 300만원과 업무용 차량 1대(2000만원 상당), 직원 특별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13개 농·축협 외에도 전남 관내 13개 농·축협이 각 분야별 3위 이내의 우수 농·축협에 선정됐다.

박종탁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농협 임직원들이 조합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남농협이 한 단계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업인과 조합원이 행복한 전남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번기 근로인력 늘린다…외국인 근로자 수 73% 확대

농촌 일손돕기 참여 인원 확대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근로인력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농업 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하고,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근로자 3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서도 구인 기관과 구직자 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농촌 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1만4000명을 배정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로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이 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서는 990명이 일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KIST와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 논의

AI 활용 정확한 데이터 산출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규환 명예연구원, 김찬수 교수(KIST·UST), 조한얼 박사 및 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 전(全) 생산과정(생산→가공→유통→소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수로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ESG실천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지수 개발로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국내외 47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 사업' 신청자 모집

29일까지 청년농업인 우선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후,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해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청년농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후계농과 20~30대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 대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 이상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